여론 악화·국정 부담에 "더 버티기 힘들다" 판단

文정부 첫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

각종 의혹 국정철학에 배치
민주당 지도부도 우려 전달
야권 책임자 사퇴 공세 부담

조동호 후보자 최정호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지난 31일 철회했다. 현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인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되며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은 모두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럼에도 지명 철회 카드를 쓴 것은 조동호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도덕성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외유성 출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당했고 아들의 '황제 유학',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여기에 해외의 '해적 학술단체'와 관련한 학회에 참석하는 등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의 자진 사퇴는 결국 부동산 투기 의혹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의 수장을 맡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도 최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4·3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조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고육지책을 쓰기는 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상 기류와 경제 침체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난국을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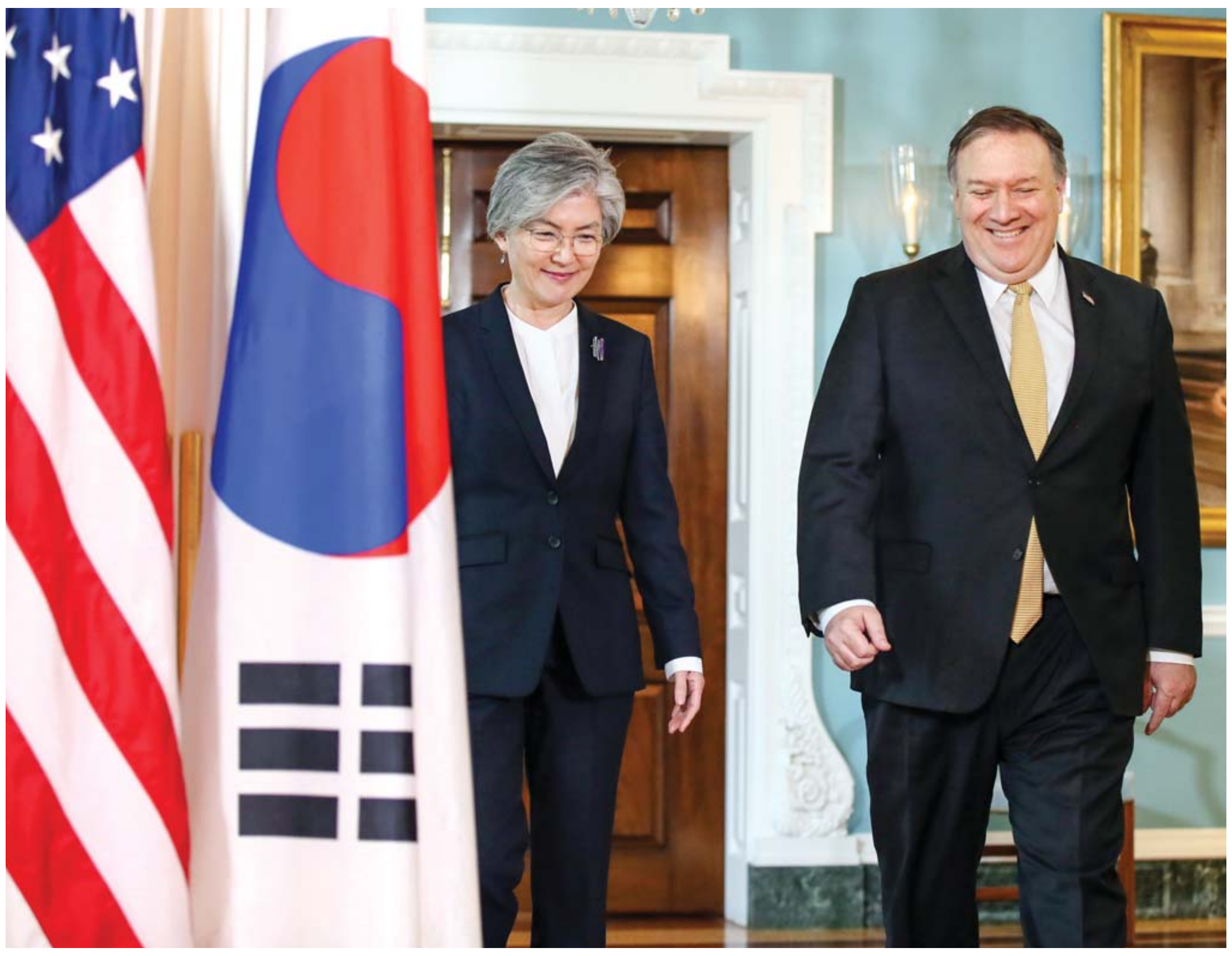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자진해 철회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두 장관 후보자가 물러났음에도 야권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향한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청와대에 계속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두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한 구두 논평에서 "청와대 스스로의 인사원칙과 위선에 질린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7개 부처 후보자 모두 지명을 철회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두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하지만 가장 흠결이 큰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 것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불량품 코드인사' 김·박 후보를 지명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장관 후보자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탈법 관행을 혁신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혁 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하노이 회담후 첫 한미외교 만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하노이 회담' 이후 첫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내달 10~11일 방미 …트럼프와 회담
얼어붙은 북미관계 풀고 '비핵화 돌파구' 모색

평화체제 구축 한미공조 협의
조기 남북정상 만남 성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11일(현지시간) 이틀 동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찾아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방문' 성격이다. 또한, 두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로, 지난번 '하노이 담판' 결렬 후 교착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일정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9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 공조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1박을 한 뒤 현지시간 11일 정상회담을 하고서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남북정상의 만남도 조기에 이뤄질지에 주목된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주춤하는 듯했던 '톱-다운' 외교가 다시 움직이는 형국이 되면서 4차 남북정상회담 역시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다만 두 정상이 만나려면 대북제재 문제를 비롯한 회담의 의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남북정상의 조기회담 성사 여부는 내달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좌우되리라는 전망에 일단 힘이 실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문 대통령과의 소통이 절실할 수 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한미정상의 논의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해법의 거리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비롯한 대북제재 해법이 마련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을 전후해 전격적으로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정상의 조기 회담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에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등 성과가 제한적일 경우, 남북정상의 만남 역시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뒤 '북한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나'라는 물음이 나오자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다 완성된 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장관 후보자 2명 낙마…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논란

부동산 투기 거르는 기준 없어
7대 배제 원칙 또 손 보나 촉각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가운데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고위공직 배제 5대 인사 원칙'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내정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드러나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2017년 5월 29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7년 11월, 기존의 5대 기준에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적발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렇게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이번에 최 후보자와 조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검증 부실 문제가 또다시 불거짐에 따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7대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인사검증 기준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집값 잡기'에 주력하는 청와대와 정부가 '투기' 등을 인사 기준에 추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하기에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고가건물 매입이 문제가 돼 물러난 데서도 보듯 '투기'에 엄격한 국민 여론을 절감했다는 점에서다.

현재 7대 원칙에서 부동산 투기를 거르는 기준은 없다. '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더 나아가 불법·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정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 역시 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수석도 최정호 후보자의 의혹을 두고 "집이 3채였다는 부분을 소명하기는 했다"며 "법적 기준이나 7대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집이 여러 채라면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맡게 될 직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해 도덕적·윤리적 배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인사검증 개선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